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 추진

전북도, 시·군·환경청과 공조해 원천 차단

원인자 최우선 처리 원칙·예산투입 행정대집행 실시

전북도는 도내 7개 시군에 방치된 불법폐기물 3만6천여톤에 대해 2021년까지 전량 처리를 목표로 연내 1만4천여톤(38.5%)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도는 최근 전수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불법폐기물 3만6,280톤(전국 1,203,400톤 대비 3%)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인식하고 시군과 함께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도 전체 폐기물량 중에서 군산과 완주지역이 88%가량 차지하고 있어 이들 지역을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처리할 계획으로 군산지역의 군산자유무역지역내 대우로지스틱스 물류 창고내 불법 수출중단으로 보관중인 8,290톤에 대해서는 폐기물 처리업체(그란에스오케이) 소재인 평택에서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내린 상태이며, 지난 3월 18일 제주시에서 폐기물처리업체를 선정 및 폐기물량을 확인하는 등 직접 처리에 나섰다.

완주지역의 (유)은진산업 부도로 인한 방치폐기물 8,000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업체 이행보증보험금으로 일부처리(20년까지)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 상관면 신리 임대공장에

방치 중인 8,000톤에 대해서도 원인자에게 조치명령 하였으나, 원인자 처리가 곤란하여 행정대집행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도는 불법폐기물 전량 처리를 위해 연도별 처리 목표를 정하고, 원인자 처리 원칙에 따라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불법폐기물의 처리원칙으로 폐기물 발생 원인자 등에게 조치명령을 내려 처리하도록 하되, 부도, 파산 등 책임자가 처리하기 어렵거나 지역주민에 환경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행정대집행 실시를 위해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폐기물협회 및 관련업체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속히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 3월5일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 실무회의를 갖고 처리 방안등을 협의하여 전주시 등 4개 시·군 불법폐기물 1만3,980톤을 연내 처리하기로 했다.

올해, 군산 일반사업장에 방치폐기물 등 1만1,130톤을 원인자 처리를 시작으로, 김제시 방치물량 2,850톤은 행정대집행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처리완료 전까지 주변 환경오염 및 화재발생 방지 등 안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군산 공공처리장에 임시 보관중인 불법폐기물 753톤은 환경

부에서 배출업체(4)에 조치명령을 내려 지난 2월 15일부터 반출을 시작하였고, 4월말까지 모두 반출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시군 부단체장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상황 및 대책을 매일 점검하는 한편, 예방 강화에도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환경청과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시군별 처리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올바로 폐기물정보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도 강화하여 도내 폐기물 처리현황을 상시 감시하기로 했다.

방치폐기물 우려사업장 등에 대해서도 시군과 합동점검을 강화하고, 주민감시 확대를 위해 불법폐기물 무허가 처리 및 불법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제도를 운영한다.

또한, 폐기물처리 공공관리 강화를 위해 도내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시설 확충하는데 올해 389억원을 투입하여 소각시설 설치 2개소, 매립장 설치 및 정비 등 5개소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 김용만 환경녹지국장은 "최근 불법 투기·방치, 수출중단 등으로 방치된 불법폐기물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우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 동원하고, 불법폐기물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기자

‘김학의·장자연’ 조사 두달 연장... “범죄는 재수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활동 연장 행안부, 버닝썬 수사 역량 총동원



박상기(오른쪽)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과거사위원회 활동 및 버닝썬 수사 관련 법무부-행안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법무부가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 활동을 두 달간 연장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재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도 사회적으로 파장이 크게 일고 있는 ‘버닝썬’ 사태와 관련해 경찰의 철저한 수사와 함께 유착 비위가 밝혀질 경우 엄벌에 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 활동과 경찰의 ‘버닝썬’ 수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이 조사 중인 ‘김학의·장자연 의혹 사건’과 경찰이 수사 중인 ‘버닝썬 사건’에 대해 진실 규명을 지시한 지 하루만의 발표다.

박 장관은 “법무부는 이들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과거사위가 건의한 대로 활동기간을 2개월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간 동안 조사를 통해 진상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되 동시에 드러나는 범죄사실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검찰권 남용 문제 등을 조사해 검찰에 권고하는 과거사위와 조사단은 강제수사 권한이 없다. 이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재수사를 하겠다는 것이다. 박 장관은 “구체적인 검찰의 재수사 방식은 생각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 문제로 논의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그런 방법을 선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은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 왔다”며 “법무부는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며 “진상규명을 통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돼 장자연 리스트 사건·김 전 차관 사건과 같은 일들의 진실이 제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거사위는 전날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 용산 철거사건의 조사를 위해 활동 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을 모으고, 법무부에 이를 건의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의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용산 철거 사건은 일부 단원들이 조사 외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난 1월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했다.

과거사위는 당초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지만 재수사 요구가 커지자 6일만에 입장을 바꿨다.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활동 기간 연장 요청을 지난 12일 거부한 바 있다.

이날 김 장관은 이른바 ‘버닝썬’ 사태부터 ‘승리·정준영 사건’까지 경찰의 모든 역량을 가동해 철두철미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데 대국민 사과를 하고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며,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스

새만금사업 투자혜택 강화... 토지사용료 ‘5%→1%’ 대폭 감면

앞으로 새만금사업 투자기업의 토지 사용료가 5%에서 1%로 대폭 감면되고 매립 사업 절차도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새만금개발 통합심의위원회를 연내에 설치할 예정이다. 기존에 따로 수립·심의하던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으로 제출하면 심의위가 이를 일괄 심의하게 된다.

심의위는 새만금청 고위공무원과 전라북도 3급 이상 각 1명을 비롯해 개발사업 전문가 5명, 도시계획위·교통영향심의회 각 3명, 에너지사용계획위·재해영향평가심의위·교육

환경보호위 각 2명 등 최소 20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부는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평균 2년 정도 걸리던 사업 절차 소요 기간이 1년 정도 줄어들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내 기업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분도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대폭 감면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새만금 특별법을 통해 외국인투자기업에 감면 혜택을 줬는데 이번에 국내 기업에게도 혜택을 확대했다. 신규 입주

기업뿐 아니라 기존 입주 기업에게도 적용된다.

또한 새만금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에서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한다. 국토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이를 위해 하반기 중 전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사자간 직접 지급이 가능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1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매립사업 절차를 간소화하고 선도 매립사업 등에 본격 착수해 사업의 정책 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주기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도 빠르게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

‘학생들에게 강한 울림의 메시지 전달’

진선미 여가부 장관, 내일 우석대서 ‘성 평등 포용사회’ 특강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전북 완주군에 있는 우석대학교를 찾아 특별강연을 갖는다.



우석대는 내일 오후 3시 전주 캠퍼스 문화관 2층 아트홀에서 진선미 장관이 우석대 초청 강의를 내선다고 19일 밝혔다. 강연 주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 사회’이다. 우석대는 장영달 총장 취임 이후 사회 각계 저명인사를 초청해 유레카 초청 강의를 펼치고 있다.

1999년부터 우석대 교양 필수 과목인 ‘유레카 초청 강의’는 매주 목요일 국내외 저명인사를 비롯해 본교 출신 선배를 초청, 그들의 삶과 인생을 통해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이뤄진다. 이는 강사 선정부터 주제까지 오로지 학생들의 다각적이고 폭넓은 안목을 키워주기 위해 진행되고

있으며, 우석대가 제시하는 ‘성찰하는 스마트 우석인’ 양성에도 뜻을 함께 하고 있다.

특히 이 과목은 형식과 규칙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진솔함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강한 울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진 장관은 순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한 사시 38회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과 제19·20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뉴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는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